1920년 4월 1일 창간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東亞日報

The Dong-a Ilbo

서울 20~29도 경기 20~30도

www.donga.com

2008년 8월 28일 (음력 7월 28일) 목요일 단기4341년

전화 02-2020-0114 구독·배달안내 1588-2020 제27088호 40판

고객님이 계신 곳이 대한생명 고객센터입니다
찾아가는서비스
1588-6363
대한생명

'종교차별 항의' 범불교도대회

〈경찰 추산 6만-주최측 추산 20만〉

서울광장~조계사 거리행진… "개선 안되면 추석이후 재개"

불교계가 27일 역대 최대 규모의 범불교도대회를 열고 논란이 돼 온 공직자의 '종교차별'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27개 종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승려 1만여 명을 비롯해 대규모로 불자(주최 측 추산 20만 명, 경찰 추산 6만 명)가 참여한 가운데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열었다. 조계종 지관 스님을 비롯한 5개 종단의 총무원장도 참여했다.

▶A3면에 관련기사

범불교도대회 상임 봉행위원장 원학(조계종 총무부장) 스님은 봉행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단법석의 대법회를 갖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통합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망을 말하고자 모인 이 자리가 현 정권과의 대결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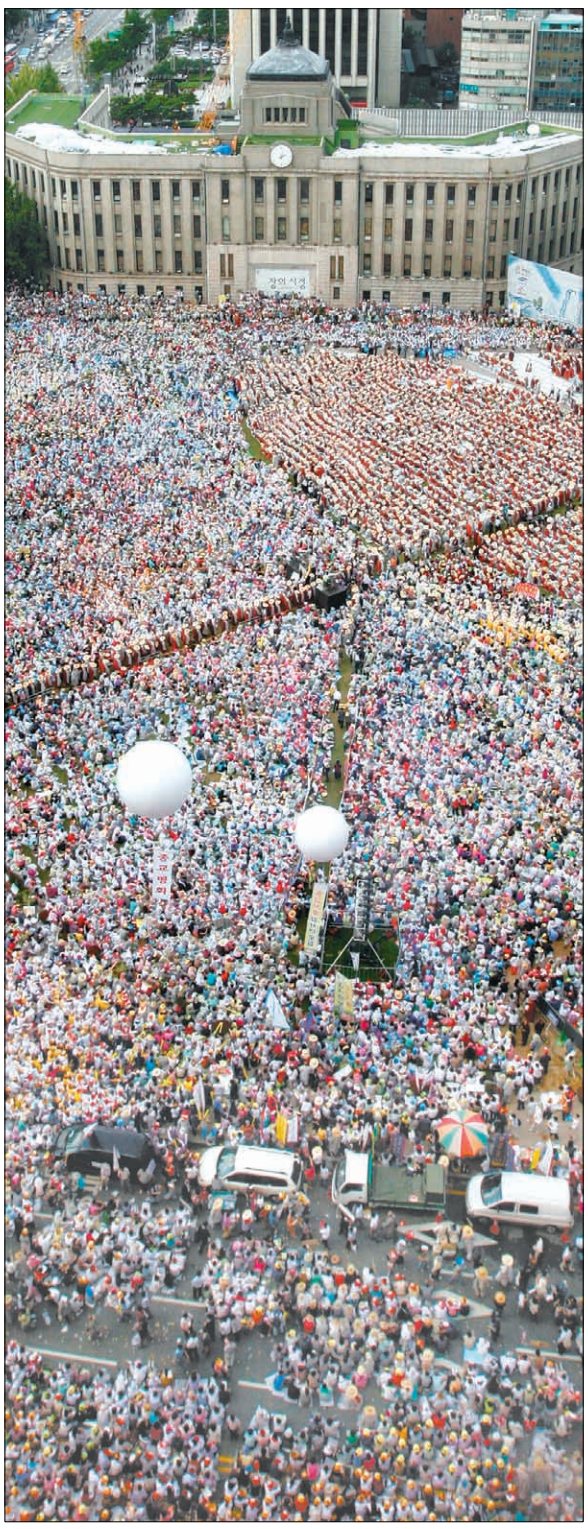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대표해 참석한 김광준 대한성공회 신부도 연대사를 통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이 보장된 나라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편향적인 종교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공직자의 종교차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어청수 경찰청장 등 관련 공직자 파면 및 문책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불교계는 대회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추석 연휴 이후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로 범불교도대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회에 참석한 스님과 불자들은 오후 4시 20분경 행사를 마친 뒤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로 사거리를 거쳐 종각 사거리, 조계사로 행진했다. 이에 따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교통이 통제되는 등 오후 6시경까지 도심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경찰은 교통통제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5개 중대 8250여 명을 배치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화난 佛心 불교계가 27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현 정부의 종교 편향을 비판하는 범불교도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발행면수 A32 B8

위장탈북 30대 女간첩 검거

장교-경관과 친분… 軍기밀-탈북자동향 유출
대북정보요원 2명 등 '독침 살해' 지시 받아
체포된 계부는 노동당서 대남공작지휘 '거물'

탈북자로 위장해 군 장교 및 경찰관 등과 친분을 쌓은 뒤 군사 기밀을 입수해 북측에 유출한 30대 여자 간첩이 검거됐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탈북 위장 남파 간첩'이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다.

▶A4·5면에 관련기사

수원지검과 경기지방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원정화(34·여)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씨가 보위부 소속 공작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탈북자 명단 등을 제공한 원 씨의 애인인 육군 대위 황모(26) 씨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합수부는 원 씨에게 간첩활동을 지시하면서 공작금을 건네고, 각종 정보를 중국에 있는 재중 북한 보위부 지부에 전달한 원 씨의 계부 김모(63) 씨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씨는 2006년 12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오기 이전에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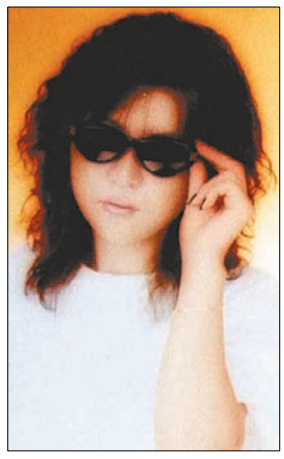
합수부에 따르면 원 씨는 1998년 12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공작기본교육을 받고, 중국 지린(吉林) 성 일대에서 탈북자를 북한으로 납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2000년 9월경 남파 지령을 받고 조선족 '김혜영'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뒤 2001년 10월 조선족을 가장해 남한 남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내세워 입국했다.

입국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원 씨는 한 달 뒤 이혼을 하고, 국정원에 탈북자로 위장 귀순했다. 이어 그는 군부대에서 반공 안보강연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황 대위 등 경기 북부지역 군부대의 정훈장교 3, 4명과 사귀면서 군사기밀 등을 빼냈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원 씨는 탈북자 단체 간부들과도 접촉해 남한에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중요 탈북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해 북측에 제공했다.

원 씨가 북측에 제공한 정보는 △군부대와 국정원 등 국가 주요 시설 위치 △탈북자 적응기관인 하나원 동기 및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명단 △대북 정보요원의 인적사항 및 군 장교의 명함과 사진 등이다.



탈북자로 위장해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중요 정보를 빼내온 여간첩 원정화 씨. 수원지검 등 합동수사본부가 증거자료의 하나로 확보한 앨범에 들어 있던 원 씨의 사진.

북측은 원 씨가 보낸 군 장교들의 명함에 적힌 e메일 계정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 씨는 정부기관의 대북 정보요원 이모, 김모 씨 등을 살해하라는 지시와 함께 암살 도구인 독약과 독침 등을 북측에서 건네받았지만 시도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합수부는 전했다.

원 씨는 지난해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위치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 센다이(仙臺)로 출국해 공작 활동을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원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군사 기밀을 관리하는 군 장교 등에게 접근했으며, 구속된 황 대위와는 동거까지 하는 등 간첩 공작을 위해 성(性)까지 이용했다"고 말했다.

원 씨가 탈북자 출신이면서도 대북 무역사업을 하고, 군 장교들과 꾸준히 교제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과 기무사에서 2005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내사를 벌인 끝에 원 씨의 간첩활동 전모가 드러났다.

합수부의 김경수 수원지검 2차장은 "탈북 위장 간첩은 북한 말씨를 쓰면서 남한 사정에 다소 어둡더라도 의심을 받지 않아 간첩활동이 가능했다"면서 "일부 탈북자 중 간첩이 존재한다는 의심이 있었을 뿐 별다른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李국방 "장병 특별정신교육"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7일 탈북 위장 여간첩 사건에 현역 장교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위급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전 군에 특별보안진단 작업에 착수하고 장병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원태제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지난해 세금 덜 걷었다면 GDP 1%P 증가했을 것"

한은 "세계잉여금 15조… 투자도 1.8%P 감소한 셈"

지난해 정부가 세계잉여금만큼 세금을 덜 걷었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고 투자도 3조9000억 원 늘어났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27일 한은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5조3428억 원을 세금으로 걷지 않았다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0%에서 1%포인트 정도 증가한 6%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한국의 GDP가 901조 1886억 원(약 9699억 달러)이었으므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GDP가 더 늘어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민간저축률, 수입유발 정도 등을 고려해 세계잉여금 발생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계산했다.

한은은 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세금만 걷었을 때보다 민간소비는 2%포인트, 투자는 1.8%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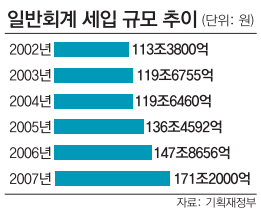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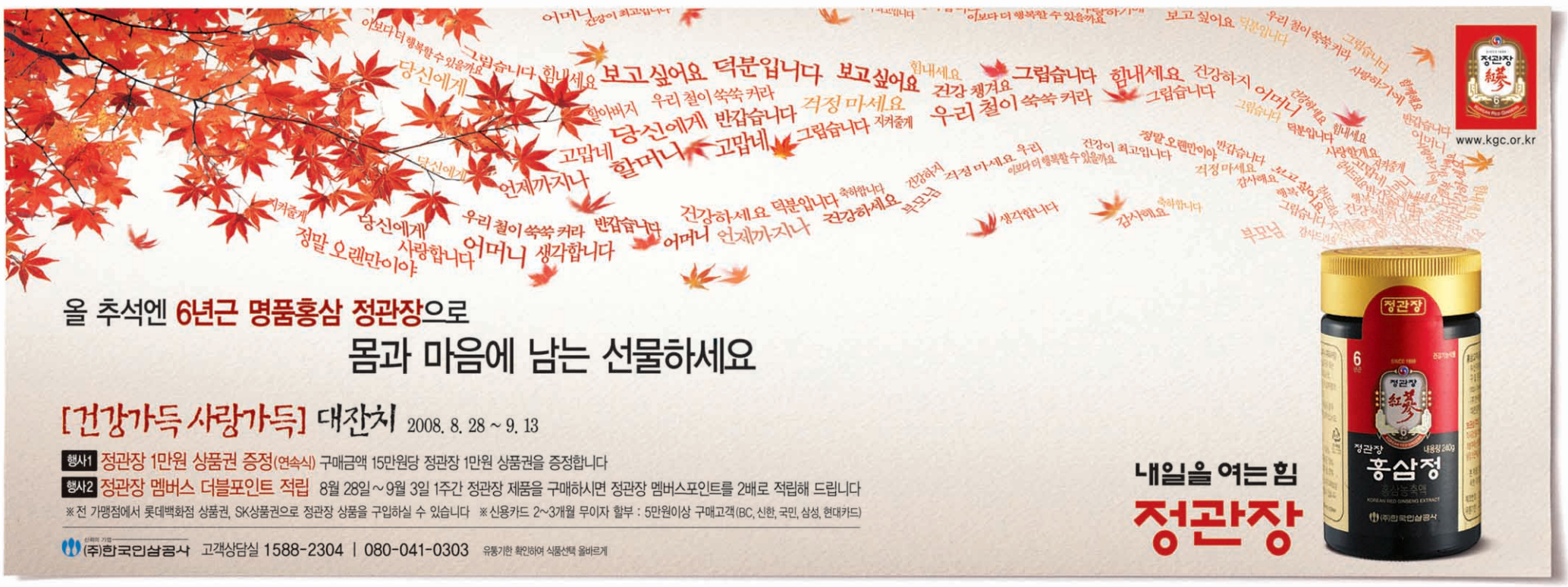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민간소비는 7조7000억 원, 투자는 3조9000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한은은 지난해 전체 초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34.5%)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업부문에, 나머지는 가계부문에 환급된다고 가정해 이렇게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나면서 세금이 필요보다 많이 걷혔다"면서 "조세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줄고, 장기적으로는 총공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지난해에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었다면 지금처럼 극심한 내수 부진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세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과도하게 징수된 세금은 추가경정예산이나 세율 조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일반회계 세입 규모 추이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